

진정한 교육자치

지난 7월 1일부터 민선교육감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교육감제도는 1960년대 도입되었으며, 그 인선은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교육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 등으로 발전하다가 2006년 12월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직선제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에도 일부 지역의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나 전국 동시선거를 통해 16명의 교육감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직선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취임한 15명과 곧 취임할 1명의 교육감은 성향에서 10명은 보수로, 6명은 진보로 구분되는 모양이다. 앞으로 이들 간의 교육정책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벌써 진보 성향의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외고규제,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학생들은 교내외 집회도 할 수 있고, 두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교육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일 것 같다. 각 교육감들은 벌써부터 일제교사, 교사의 정당가입 등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교육에서 전 국가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보수 신문들은 연일 교육감 간의 정책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일부 교육감들의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격정일 수도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국가에 일

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이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쟁쟁하다. 플라톤은 공익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국가가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취해 국가에 알맞은 인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통치자가 청소년들을 국가에 필요한 존재로 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가 중심교육관은 계몽사상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교육 역시 이러한 입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정부는 법적 강제를 가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였고,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가치대로 교육할 부모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국가가 국가의 권위와 법적 한계를 벗어나 비극을 초래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 도예베르트에 따르면 국가가 지닌 칼의 힘은 일정한 영역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되는 가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자녀교육의 최종적인 권한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4)라고 말한다. 이는 교육의 방법에 강조점을 둔 구절이지만 당부 대상이 부모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허락한 고유한 권한인 것이다. 좀 더 과격히 말한다면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은 오늘 우리 식탁에 무엇을 올려야 할 것인가를 타인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역할은 사회의 다양한 고유영역들이 그들의 특징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가치와 관련한 간섭이 아니라 재정적 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향이 서로 다른 교육감들의 선출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것은 진보가 옳고 보수가 틀렸다는 주장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 권한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감에 따라서 지역마다 교육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길 바란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 때문에 지역을 옮겨가는 부모들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적 가치관 때문에.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만일 그들이 관할 지역에서 교육의 획일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지위와 권한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관할 지역내에서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 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부모는 자신들이 선택한 교육감의 가치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의 가치와 다른 소수의 부모가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고유한 권한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내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소수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사학에 대한 배려야말로 자녀교육의 권한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 자신들만의 학교를 만들고,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기능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사학들이 부모의 고유권한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면

지역 교육청은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도 세금을 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돕는 기관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적 교육의 가치가 세속적 인문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닌지 파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학교를 만들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가치문제는 버려지고 학력 담론만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독교인이 자녀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학력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이다. 기독교적 가치와 무관한 귀족학교는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킬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글. 김중락 경북대 역사학과 교수

